장마 뒤끝 방역 장마전선이 한반도를 벗어난 29일 광주시 동구청 방역반이 동구 농장다리 인근에서 연막소독 작업을 실시하고 있다. 동구는 여름철 수인성·식품매개 전염병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 '건강한 여름나기 종합대책'을 마련해 특별예방 활동을 벌이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수도권 편중' 안깨면 악순환 되풀이

■광주·전남 경제 비중 7년째 제자리

광주, 지역 총생산 전국 16개 지자체중 15위

전남, 농어업·제조업 줄고 건설·서비스 늘어

국가 경제 규모에서 광주·전남이 차지하는 비중이 2000년 이후 정체돼 있는 것이 다시 한번 통계로 입증됐다.

전문가들은 광주 전남 시·도가 경제살리기에 총력전을 펴고 있지만 성장과 소비를 견인할 대기업을 비롯한 제조업 기반의 취약, 수도권 편중 육성정책 등 복합적인 요인이 맞물려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서울 경기 등 수도권이 지방자원을 흡수해 인구·투자자본이 집중되는 등 고질적인 문제가 광주·전남을 비롯한 비수도권 경제 성장의 발목을 잡는 가장 큰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광주시**=29일 통계청이 GRDP의 기준연도를 2000년에서 2005년으로 변경해 2007년 경제현황을 분석해 본 결과 전국 대비 전국 16개 지자체 가운데 15위(GRDP 21조2천810억원)를 기록했다. 광주는 이번 집계결과 기준년인 2005년 지역내 총생산(GRDP)은 18조9천억원으로 구계열(2000년) 보다 5.8% 늘어났다. 지난 2000년 GRDP 13조1천350억원에 비해서는 두배 가까운 성장세를 보였다.

1인당 지역 내 총생산도 지난 2000년 950만1천원에서 1천472만7천원으로 55% 증가했다.

광주의 경우 이같은 수치의 기준이 되는 생산구조별 현황을 분석한 결과 구계열에 비해 서비스업의 비중이 3.8%p 증가했으며, 광업, 제조업, 건설업 비중은 각각 2.3%p, 1.7%p 낮아졌다. 이 과정에서 산업인프라의 근간이 되는 설비투자 비중은 0.6%p 높아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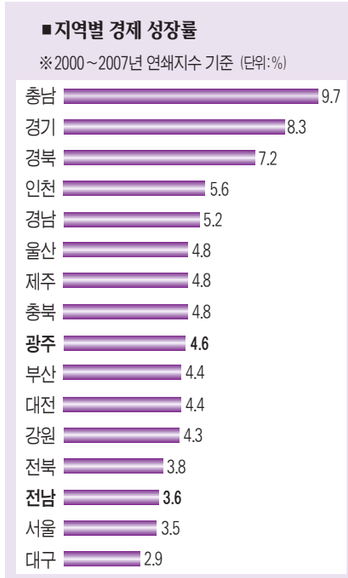
그러나 고질적인 수도권과의 산업·경제적인 격차를 극복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광주시의 경우 2000년~2007년까지 경제성장률 평균에서 4.6%로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중위권으로 약진했다. 이는 공룡화로 성장의 한계를 보여준 서울의 3.5%를 훨씬 앞지른 수치다. 경제 성장률 추이는 광주가 2001년 3.4%에서 2002년 9.5%, 2003년 1.6%, 2004년 1.5%, 2005년 6.5%, 2006년 6.5%, 2007년 3.7%를 기록했다.

특히 광역경제권에서 호남보다 많은 2개 권역이 편성돼 지역산업 경제 소외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경남은 5.2%의 성장률을 보여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의지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전남도**=지역내총생산은 지난 2000년 27조8천290억 원에서 2007년 47조220억 원으로 7년 새 69%인 19조1천930억 원이 증가했다. 1인당 지역 내 총생산도 지난 2000년 1천367만6천 원에서 2007년 2천602만7천 원으로 1천235만1천 원(90.3%)이 늘었다. 성장률도 2001년 3.3%, 2002년 8.0%로 피크를 기록한 이후 2003년 2.2%로 내려앉았지만 지난 2007년엔 다시 6.6%를 기록하는 등 7년간 연평균 3.6%가 넘는 성장세를 기록했다. 전남의 이 같은 성장률은 타지역에 비해선 다소 낮았지만 같은 기간의 선진국과 비교하면 미국의 낮은 성장 지역인 미주리(1.1%), 오하이오(0.6%)보다 높았으며 일본의 높은 성장 지역인 미에현(3.9%), 아이치현(3.0%)과 비슷한 수준이다.

지역내 생산 및 지출구조에 있어서는 농림어업분야의 생산구조가 지난 2005년 10.9%에서 2007년 9.2%로 소폭 감소했으며 광업 및 제조업 역시 36.2%에서 35.3%로 감소세를 보였다. 반면 건설업이 전체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5년 8.9%에서 2007년 10.0%로 1.1%P 그리고 서비스업이 39.0%에서 41.2%로 2.2%P가 상승, 지역 산업구조가 고부가산업위주로 재편되는 모습을 보였다.



전남도 관계자는 "지난 2000년 이후 전남지역에 대규모 산업단지가 조성되고 도로와 교량 등 SOC(사회간접자본)가 확충되면서 산업구조도 전통적인 1, 2차산업에서 3차산업으로 무게중심이 옮겨가고 있다"며 "오는 12월 전남도내 22개 시·군별 지역내총생산이 처음 발표되면 전남 경제의 성장세와 산업구조 고도화 추세가 구체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홍행기기자 redplane@kwangju.co.kr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김준규 검찰총장 내정자 청문회 예상 쟁점

요트·승마 '호화 스포츠' 공세 재산 형성 과정 의혹도 캘 듯

김준규 검찰총장 내정자가 29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임시 사무실로 출근해 다음달 있을 국회 인사청문회 준비에 들어감으로써 향후 어떠한 의혹들이 청문회의 쟁점으로 부상할지에 관심이 쏠린다.

김 내정자는 총괄자료제출팀과 신상팀, 리허설팀, 비전팀 등 4개팀 20여명으로 짜인 청문회 준비단의 지원을 받아 모든 의혹에 당당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준비단은 일단 겉으로 드러난 김 내정자의 재산 형성과정과 병역관계 등에서 큰 문제가 없다고 자신하고 있다.

김 내정자와 관련해 지금까지 불거진 주요 의혹은 호화 스포츠를 즐기고 미모의 여성들과 어울려 다녔다는 것 등이지만 준비단은 대부분 모함이거나 사실 관계가 부풀려진 것이어서 대수롭지 않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김 내정자가 요트와 승마 등을 즐기고 외국인이 주로 회원인 스포츠클럽의 회원권(7천만원 상당)을 보유하는 등 서민과 다소 거리가 먼 삶을 살았다는데 초점을 맞춰 공세를 취할 것으로 보인다.

8억여원의 예금을 포함해 총 23억여원에 달하는 김 내정자의 재산형성 과정도 집중적으로 캘 것으로 예상한다. 김 내정자는 이러한 의혹에 대해 29일 조목조목 해명하거나 반박했다.

그는 이날 "술과 골프를 하지 않는 대신 각종 스포츠를 즐긴다. 요트와 승마는 기회가 닿아 저렴한 비용으로 배웠는데 호화 스포츠만 하는 것처럼 비치는 부분이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해 부산고검장 시절 관내에서 아시아·태평양지역 고위급 검사회의를 열면서 요트협회의 지원을 받아 참석자들을 요트 관광시켰던 것을 계기로 5주간 세일링요트를 배웠다"며 호화요트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승마를 즐겼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올해 대전고검장을 하면서 대전시장의 권유로 시가 운영하는 승마장에서 1만원권 티켓 20장을 끊어 승마를 배웠다"며 해명했다.

김 내정자가 가장 황당해하는 대목은 '미스코리아 출신들과 어울린다'는 괴소문이다.

그는 지난 5월8일 오후 7시부터 열린 2009미스코리아 대전·충남선발대회에 모 언론사의 초청을 받아 심사위원으로 참석한 게 전부이고 염문설은 사실무근이라고 단언했다.

지금까지 불거진 의혹은 대부분 해명됐음에도 인사청문회를 무사히 통과할 수 있을 것으로 낙관하기에는 시기상조라는 게 법조계 주변의 중론이다.

천성관 전 검찰총장 후보를 낙마시킬 정도의 막강한 정보력을 발휘한 야권이 이번에도 김 내정자의 약점을 잡아낼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검찰총장직을 수행하는데 걸림돌이 될 정도의 부조리나 비리가 아직 발견되지 않았지만, 인사청문회가 임박할수록 새로운 의혹이 얼마든지 제기될 수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연합뉴스

검찰 간부인사 이르면 주내 단행

법무부는 검찰 수뇌부의 장기간 공백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검사장급 이상 고위 간부의 후속인사를 이른 시일 안에 단행할 방침이라고 29일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검찰총장이 내정되면 조속히 후속인사를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왔다"며 "일각에서 (법무부장관이) 검찰총장 내정자의 의견을 들어 검찰인사를 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주장을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며 이같이 말했다.

검찰총장이 현재 공석이므로 법률상 그 직무를 대리할 권한이 있는 대검찰청 차장의 의견을 들어 인사를 단행하면 법률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게 법무부의 입장이다.

검사의 임명 · 보직을 규정한 검찰청법 34조는 법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검찰 인사를 하는데 이 경우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검사의 보직을 제청토록 하고 있다.

법무부는 "다만 인사 과정에서 사실상 검찰총장 내정자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음은 별개 문제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김준규 검찰총장 내정자와의 협의를 거쳐 빠르면 이번주 내에 검사장급 이상 간부 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연합뉴스